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中, 고시 해설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가 공개된 장소의 의미

이 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즉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동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여기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1 공개된 장소의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판례 공개된 장소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8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된 장소 및 순수한 사적(私的)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1)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25조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사전 의견수렴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제15조제1항제1호),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제1항제6호) 등에 한하여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판 설치의무 등 이 법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비공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는 규정상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법에서 정한 안내판 등 설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원칙·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